

“주력업종 고전·광주형 일자리 우려”

광주국세청·한은지역본부 국정감사서 제기 이정 한은 본부장 “중소기업 지원방안 검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17일 광주지방 국세청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주력업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광주형 일자리에 대한 일부 우려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대외여건 약화와 내수기반 위축으로 광주·전남 주력업종인 자동차, 철강, 조선 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은행 차원에서 주력업종의 어려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심기준 의원은 “광주·전남지역은 자동차, 철강, 조선산업이 어렵고, 자영업·서비스업 비중이 높고 고용의 질이 저하되고 있다”며 “광주국세청은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금징수 유예 등 세정지원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장흥지정장과 광주지검 부장검사를 지내 지역에 각별한 애정이 있다”고 밝힌 뒤, “생산·투자·수출 모든 경제지표가 마이너스를 기록해 마음이 우울하고 답답하다”며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SUV 시장이 포화상태에서 광주형 일자리가 1,000cc급 경형 SUV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게) 맞느냐”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은 “주력산업에 대해 모니터링을 하고 보고서를 내고 있다”며 “중소기업지원 내규를 점검하면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미애 기자



목포해상케이블카 시승하는 환노위의원들 17일 오전 목포시 유달동 목포해상케이블카 고하도 승강장 옥상정원에서 현장시찰에 나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케이블카를 시승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선관위, 선제적 단속활동 전개 서갑·광산갑 ‘관심지역구’ 지정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6개월 앞두고 선제적 예방·단속활동 전개와 단속역량 집결을 위해 광산구갑·서구갑 지역구를 ‘관심지역구’로 지정하고 18일부터 집중 예방·단속활동에 들어간다고 17일 밝혔다.
관심지역구 지정은 광주지역 8개 지역구를 대상으로 정당·입후보 예정자간 경쟁구도, 위법행위 발생빈도, 신고·제보, 언론보도 등 객관화할 수 있는 단위지표를 측정하고 지역구별 선거정황을 고려했다.
광산갑은 불법 권리당원 모집 언론보도, 위법행위 신고·제보 빈번 등 선거과열 징후가 있고 경쟁이 치열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서갑은 입후보예정자들의 인지도 제고활동이 활발히 펼쳐지는 등 전반적인 측정지표가 광주지역 8개 지역구 중 가장 높았다. /황애란 기자

치밀한 자료분석 통한 ‘지역맞춤형’ 의정활동

민주화운동·정책자금·한전공대 등 현안 고군분투

국감스티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지역 유일한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송갑석(광주 서갑) 의원은 국회에서 초선이지만 다선을 능가하는 의정활동으로 성과를 만들어 내면서 존재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광주시당 위원장과 국회 예결특위 위원 등을 맡아 지역민들과 중앙정부 간 소통창구는 물론 지역 예산과 민원을 총괄하면서 광주시의 민원실장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현안에 대해 팔을 걷어부치며 고군분투하고 있다.
올해 국감에서는 치밀한 자료준비와 분석을 통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아울러 지역과 관련된 각종 문제에 대해 지역민의 시각에서 정책적·제도적 허점을 파고 들어 ‘지역맞춤형 국감’의 전형을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국감에서 광주시에 대한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율이 전국대비 3%대로 5년 연속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광주지역 지원금은 지난 10년간 총 1조2,356억원으로 3.3%에 불과했고, 연도별 지원비중도 매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송 의원은 “정책자금의 지역별 편중 지원으로 광주를 비롯한 지역 중소기업들의 활로가 막혀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한전공대 발목잡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나주 분사 항의방문에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한전공대 설립반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한전의 재정상황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과대표장된 논란은 부각시키면서도 한전공대가 가져올 국가적 부가가치에 눈감는 근시안적 시각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R&D 예산이 5년 연속 최하위인데 전국대비 1.6%에 불과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감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2014년부터 최저 0.2%, 최고 1.5% 수준을 웃돌며 5년 연속 산업기술 R&D 지원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송 의원은 고위직 간부들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배임행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은폐 의혹 간부들에 대한 경질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업들의 활로가 막혀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한국전력 국감에서는 자유한국당의 한전공대 발목잡기에 대해 강력한 대응방향을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나주 분사 항의방문에 이어 지난달 17일에는 한전공대 설립반대를 위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지속적으로 찬물을 끼얹어 왔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한전의 재정상황 등 한전공대를 둘러싼 과대표장된 논란은 부각시키면서도 한전공대가 가져올 국가적 부가가치에 눈감는 근시안적 시각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광주·전남 R&D 예산이 5년 연속 최하위인데 전국대비 1.6%에 불과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국감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2014년부터 최저 0.2%, 최고 1.5% 수준을 웃돌며 5년 연속 산업기술 R&D 지원 최하위에 머물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가스공사 국감에서 송 의원은 고위직 간부들이 결탁해 조직적으로 배임행위를 은폐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파장을 일으켰다. 송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더불어 은폐 의혹 간부들에 대한 경질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정기 브리핑



서삼석 “수입 냉동고추 국내시장 30% 잠식”

저울관세로 대량 수입된 냉동고추가 낮은 가격을 앞세워 국내시장을 잠식함에 따라 고추농가들은 눈물짓게 하고 있다. 17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이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8년 냉동고추 수입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6년 20만톤이 수입됐던 냉동고추는 2년 만에 20%가 늘어나 2018년에는 24만톤에 달했다.
건고추가 아닌 냉동상태로 수입되는 이유는 270%의 고율관세가 부과되는 건고추에 비해 가공 품으로 취급되는 냉동고추 관세율이 27%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내 고추가루가 1kg당 2만원에 거래되는 반면

수입 냉동고추를 사용한 고추가루는 7,000원에 불과하다. 국내에 비해 3배 가까이 염가로 판매되기 때문에 빠르게 국내시장을 잠식해가고 있다.
600g당 6,940원인 국내산 고추의 작년 생산량이 7만2,000톤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8,30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국내 고추시장의 30% 가까이 수입산이 잠식하고 있는 셈이다.
서 의원은 “국내 고추농가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검역강화 및 관세율 상향 등 조치와 함께 냉동고추가 고춧가루 형태로 유통되는데 위협소지는 없는지 관계당국의 철저한 검토와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손금주 “일본산 방사능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

최근 일본을 휩쓸고 지나간 태풍 ‘하기비스’로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돼 방사능 오염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무소속 손금주(나주·화순) 의원은 17일 국민 밥상·먹거리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방사능 오염 여부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 언론보도에 따르면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 현에 보관됐던 폐기물 자루가 침수됐고, 이 중 여러

개가 강 등으로 흘러갔으나 정확한 유실숫자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 의원은 “최근 태풍 하기비스가 지나간 이후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이 유실되면서 국민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며 “유실된 방사능 폐기물을 모두 확보·수거하고 해수 등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정확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전체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영일 “한일관계 악화로 항공업계 수천억 피해”

한일관계 악화로 항공업계의 피해가 연말까지 최소 5,400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7일 대안정치연대 윤영일(해남·완도·진도) 의원이 확보한 한국항공협회의 ‘일본 경제규제 관련 항공업계 피해 최소화화 위한 정책지원 건의서’에 따르면 한일관계 악화로 일본 여객은 전년 8월 대비 22.7% 감소했고, 정기편 역시 주 830회에서 346회로 축소 운영되면서 올해 연말까지 매출 피해가 최소 5,369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윤 의원은 “중국 사드보복 때와는 달리 지금은 감감 무소식이다”면서 “국토부가 항공업계의 피해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무관심·무대책을 꼬집었다.
윤 의원은 또 “한일관계 악화 여파가 앞친데 달린 격으로 지방공항의 적자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면서 “이들 공항이 정부에 납부하는 국유재산세를 일시 면제하는 방법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강병운 기자

KODA
Korea Developer Association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도시를 바꾸는 밸류 크리에이터!

모두가 같은 길을 걸을 때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찾습니다.
모두가 한 곳을 바라보고 있을 때 새로운 시선으로 숨겨진 가치를 찾아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땅과 도시의 고부가가치를 디자인하고 창조하는 길!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해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호남지회

www.koda.or.kr